

충남리포트 제170호

ChungNam Report

2015. 6. 5

CONTENTS

< 요약 >

1. 농촌마을 재편의 필요성
2. 농촌마을 재편의 기본원칙
3. 농촌마을 재편의 추진유형
4. 유형별 재편방안
5. 정책 제언

과소화 · 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choyj@cni.re.kr

본 연구는 과소화 및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 기능적 ·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요 약

-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공동체)의 상실 및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소 · 고령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별 재편 방안을 제시함
 -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유형①) : 비슷한 여건의 여러 마을을 묶어 커뮤니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기존 각 마을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를 운영 하거나 새로운 리더 선출을 통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음
 -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유형②) : 2개 이상의 마을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병하거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마을에 그렇지 못한 마을을 편입시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는 행정 효율성 제고도 가능함
 - 마을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유형③) : 마을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를 재구성하거나 전면 재개발을 통해 전혀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는 외부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함
 - 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유형④) : 마을 전체 또는 특정 주민(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등) 일부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최근 ‘공동홈 조성사업’ 등이 본 유형에 해당됨

농촌마을 재편의 필요성 ◀

01

- 농촌지역 과소화·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안이 미흡하고 관심에서 소외됨
 - 2010년 기준 지난 5년간 충청남도 동지역의 65.8%는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면지역의 86.8%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또한, 2040년까지 94.1%의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임준홍 등, 2014)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경우 과소·고령마을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대안 마련의 노력이 진행중임
 -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의 마을”을 ‘한계마을’이라 정의하고, 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논의와 정책 마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과소화 및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기능적·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첫째, 마을재편의 관심은 마을기능의 유지 및 활성화에 집중되어야 함
 -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고 유지·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마을의 기능이 유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마을재편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함
 - 즉, 마을재편을 다른 경제적 논리나 이론적인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제하고, 농촌마을 하나하나가 국토의 정주공간의 하나로 바라보는 전제하에 가운데 마을 재편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행정적·기능적·공간적 재편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이 각각 별개로 적용이 되는 개별 전략이 아닌 반드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방법임
 - 행정적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도 이후에는 반드시 기능적 재편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공간적 재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또한, 기능적 재편에 있어서도 일정한 형태의 공간적 재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마을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마을 커뮤니티 재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마을 이전은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집락커뮤니티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다수의 마을 간의 연계와 교류를 통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시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재편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선부른 마을 이전 등의 공간적 재편은 오히려 탈농과 이농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넷째, 마을재편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주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임

-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마을주민이지, 외부의 편협된 시각과 판단은 오히려 마을재편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단, 마을주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에 있어서는 마을주민 이외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

● 다섯째, 마을재편 이전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차별화된 맞춤형 계획수립이 우선 필요함

- 한계마을 관련 선행연구(조영재 외, 2013)와 같이, 한계마을의 진행은 마을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편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는 마을 각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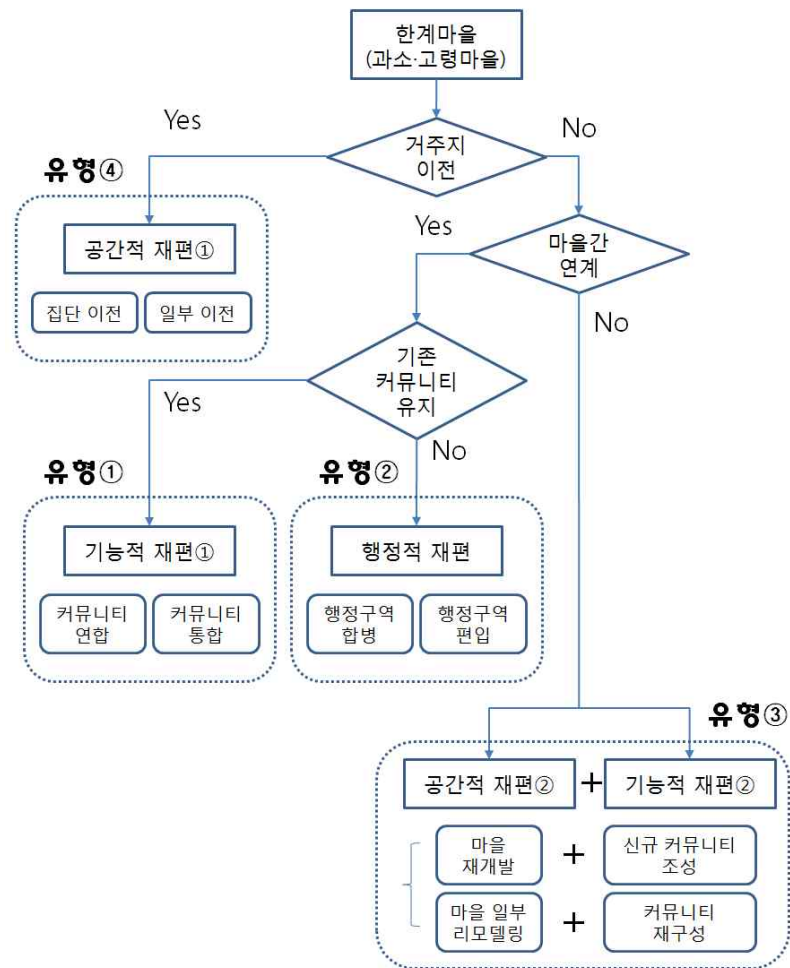
● 여섯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함

- 마을재편 전략은 한계(限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마을과는 구별되는 전략이지만, 그렇다고 일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별개의 전략은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전체 농촌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적용이 필요함
- 또한, 마을기능의 유지 및 활성화라는 마을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03

▶ 농촌마을 재편의 추진유형

- 농촌마을 재편방안 마련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가, 마을간 연계가 요구되는가, 기존 마을의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가 등의 사항을 바탕으로 첫째,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형(유형①)’, 둘째,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유형②)’, 셋째,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유형③)’, 넷째, ‘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형(유형④)’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함



〈그림 1〉 농촌마을 재편의 추진유형

1) 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형(유형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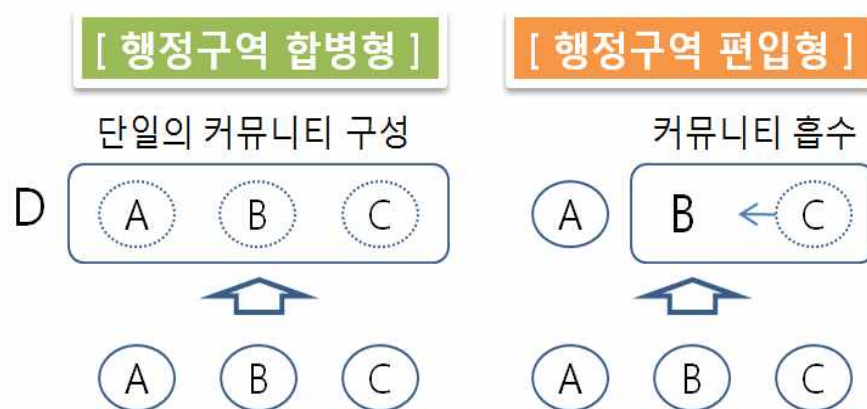
- 기존 마을의 커뮤니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뮤니티 리더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조직(연합체 등)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마을별 기존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 ‘커뮤니티 연합형’과 커뮤니티 연합형과 유사하지만, 단지 새로운 커뮤니티 조직의 구성이 리더나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어 새롭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통합형’이 있음



〈그림 2〉 커뮤니티 연합형 / 통합형 재편방안

2)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유형②)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마을간 연계를 통해 기능적 재편을 도모한다는 측면은 유형①과 동일하나, 단지 기존 마을 커뮤니티 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커뮤니티 재창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음
 - 본 유형의 목적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해 새롭게 커뮤니티를 재창출하고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유형①과 동일하고, 단지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수단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개 이상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병되어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는 형태로 기존 마을의 커뮤니티의 잔존을 꼭 전제로 하지는 않고 전혀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재편 방법으로 ‘행정적 합병형’이 있음
 - 동일한 조건으로 마을이 합병되는 ‘행정적 합병형’과는 달리 거점기능이나 중심성 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여건을 갖는 특정마을이 중심이 되어 그렇지 못한 마을을 행정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행정적 편입형’이 있음



〈그림 3〉 행정구역 합병형 / 편입형 재편방안

3)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유형③)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해당 마을 자체적으로 공간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을 도모하는 유형으로, 주변 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형①, 유형②와는 차이가 있음
- 마을전체를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신규마을 조성 + 신규 커뮤니티 조성형’이 있음
- 마을 전체의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이 아닌 마을의 일부만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역시 외부 인구의 전입을 통해 커뮤니티 새롭게 재구성 하는 ‘마을 일부 모델링 + 커뮤니티 재구성형’이 있음
- 커뮤니티의 재편은 기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아닌 귀농·귀촌 등의 외부 인구 전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의미하며, 또한 마을 리모델링 없이도 신규 커뮤니티의 조성 및 커뮤니티 재구성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부 주택 등은 재정비될 것임을 감안하여 ‘마을 일부 리모델링 + 커뮤니티 재구성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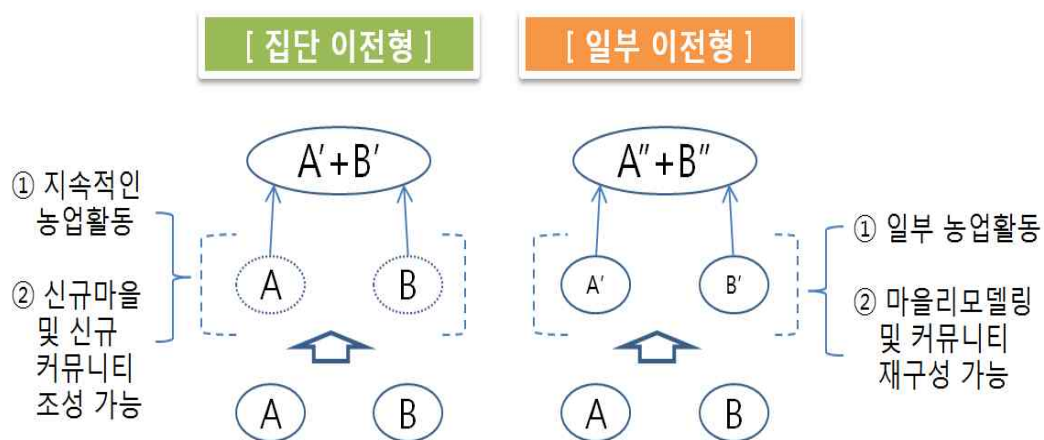


〈그림 4〉 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 재편방안

4) 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형(유형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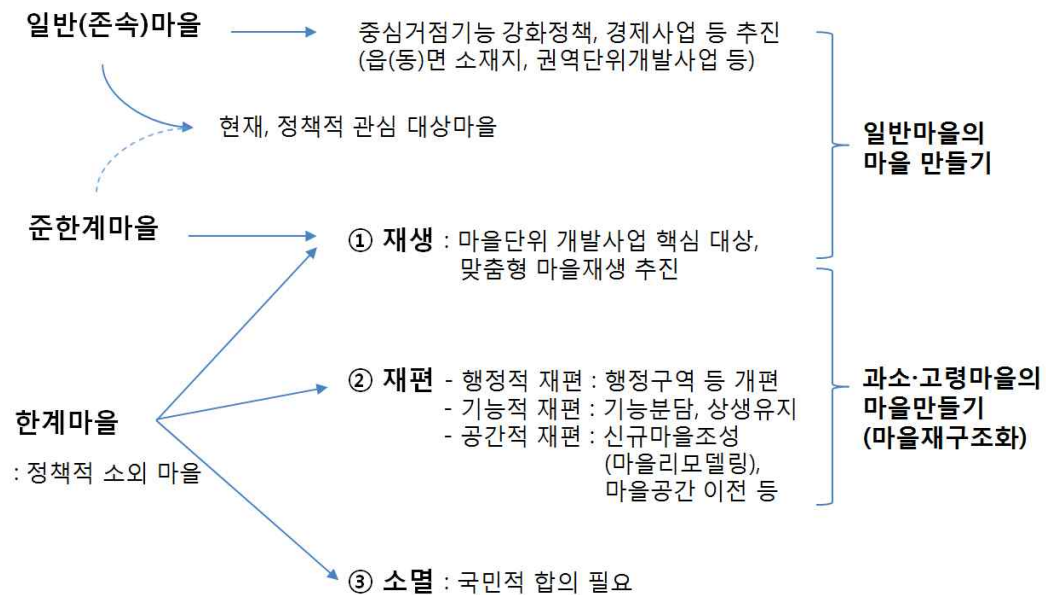
●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 하거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간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간적 재편을 도모하는 유형으로, 기존의 마을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 마을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유형③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한 개 마을의 또는 다수 마을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집단이전형’과 마을 전체가 아닌 고령자나 보호가 필요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일부가 이전하는 방법으로, 역시 한 개의 마을 또는 다수의 마을에서 이전해 온 주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일부이전형’이 있음
- 집단이전을 통해 남겨진 기존마을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은 이전을 했지만 기존의 농업활동기능을 그대로 남겨두어 이전한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활동을 이어가거나, 유형③의 재편방법을 통하여 신규마을 조성 및 신규커뮤니티 조성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일부 이전의 경우도 이전을 통해 공가나 공터로 남겨진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역시 이주해 나간 주민들의 왕래를 통해 농업활동을 지속해 나가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 인구를 유입시켜 마을 커뮤니티를 재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그림 5〉 집단 이전형 / 일부 이전형 재편방안

-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남도 농촌마을 만들기의 틀을 과소·고령마을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제시하고자 함
 - 우선, 과소·고령화(한계화)의 정도에 따라 농촌마을을 ‘일반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 이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영역이 ‘일반마을’과 일부 ‘준한계마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계마을’을 정책적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이도록 함
 - 즉, 마을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량과 재생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을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적용하여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마을(자체 역량으로 재생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마을)은 ‘(가칭)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함



〈그림 6〉 농촌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의 핵심은 과소·고령마을을 방치하지 않고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TF팀과는 별도의 TF팀이나 전문가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촌마을 재구조화’를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의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함

●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 첫째, 농촌마을의 한계화 상황을 조사하고 DB로 구축함. 충남 15개 시군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계마을 1차 조사(마을인구, 고령인구)를 실시하여 DB로 구축하고, 이후 자연마을 단위까지 세분화 하여 조사를 실시함
- 둘째, DB구축된 한계마을을 중 한계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된 마을을 시군의 추천을 받거나 현장 조사를 통하여 판단 후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함(매년 2~3개 마을 선정, 마을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을 만들기 추진)
- 셋째, 전문가 그룹의 현장연구를 통하여 재생 가능성 여부 및 재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분석함
- 넷째, 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주민교육(역량강화) 및 전문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창조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이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함
- 다섯째, 재생이 불가능하고 판단되는 마을은 마을의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형별 마을재편을 도모하는 ‘창조마을 만들기’를 추진함
- 여섯째, 이후 창조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조영재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2, choyj@cni.re.kr

※ 본 연구는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2014)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참고 자료 ◆

- 성주인·박시현, 2012,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2012.6.12), pp.3~48
- 임준홍·홍성효, 2014,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리포트 제109호
- 조영재 외,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07
-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9/21(3), pp.163~182
- 大野晃, 2008.11,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 大野晃, 『山村環境社会学序論- 現代山村の限界集落と流域共同管理』, 農山漁村文化協会, 2005.03
- 大西隆・小田切徳美・中村良平・安島博幸・藤山浩, 『これで納得集落再生 - 「限界集落」のゆくえ』, 2011.01, 株式会社ぎょうせい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와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 · 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동·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규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 · 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 · 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